

세계은행그룹과 IMF의 지배구조 개혁과 시사점

박 영 준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거시팀장 (yjpark@kiep.go.kr, Tel: 3460-1109)

김 연 실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금융팀 연구원 (ykim@kiep.go.kr, Tel: 3460-1187)

1. 논의 배경
2. 세계은행그룹 지배구조 개혁의 주요 내용
3. IMF 지배구조 개혁의 방향과 주요 내용
4. 우리나라의 지분 현황과 시사점



주요 내용

- ▶ 최근 열린 G20 재무장관·중앙은행총재 회의(4.23)와 IMF·세계은행 연차총회(4.24-25)에서 국제금융기구 지배구조 개혁에 대한 의미 있는 결론이 도출되었음.
 - 양대 회의에서는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경제력의 비중에 상응하게 신흥·개도국의 IMF 쿼터 및 세계은행의 의결권을 조정하는 문제가 논의되었음.
- ▶ 세계은행그룹은 개발위원회 회의(4.25)에서 의결권 개혁 (Voice Reform)과 자본증자 방안에 합의함.
 - IBRD의 의결권 개혁은 새로 고안된 지분조정공식을 적용하여 가맹국의 의결권을 조정하였으며, 일부 선진국의 의결권 중 3.13%를 개도국 및 이행국으로 이전하기로 함.
 - 이로써 중국의 의결권이 종전의 2.77%에서 4.42%로 크게 늘어 미국·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영향력이 큰 국가로 부상했으며, 인도·브라질·멕시코 등도 이번 조정의 수혜국임.
- ▶ 이번 IBRD 개혁안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투표권 비중도 0.99%(22위)에서 1.57%(16위)로 확대되었으며, IFC 투표권 비중도 0.67%(28위)에서 1.06%(21위)로 커짐.
 - 이번 세계은행그룹의 의결권 조정은 현재 진행 중인 IMF의 쿼터 개혁에서도 우리나라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.
 - ▶ G20 재무장관·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는 IMF의 제4차 일반개정에 따른 쿼터 개혁시한을 2010년 11월 서울 정상회의까지 앞당기기로 했음.
 - 이때 새로운 쿼터 계산공식과 최근 갱신된 자료를 사용하여 적정 쿼터를 산정하고 그 과정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했음.
 - 우리나라의 IMF 계산쿼터는 2.176%이지만 현재 적용되는 쿼터는 1.35%에 불과하여 앞으로 상향조정될 여지가 충분히 있으며, 투표권 비율도 높아져야 할 것으로 보임.
 - ▶ 우리나라는 IMF 쿼터 증액을 현실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행함에 있어 우리와 비슷한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들과의 공조 및 협력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.
 - 아울러 국제금융기구 발행채권 매입 등을 통해 국제금융기구의 재원 확충에도 적극 참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할 수도 있을 것임.

1. 논의 배경

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20을 중심으로 국제금융기구 지배구조 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음.

- 국제금융기구는 국제금융질서 유지와 회원국의 경제발전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여러 나라가 모여 설립한 금융기구로서 IMF, 세계은행그룹과 다수의 다자개발은행들이 대표적임.

■ IMF와 세계은행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 지배구조 개혁은 회원국들의 쿼터(quota)와 투표권 조정이 핵심임.

- 특히 신흥·개도국의 경제력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행 IMF 쿼터 및 세계은행의 의결권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.

- IMF의 경우, 특히 유럽국가들이 자국의 경제규모에 비해 높은 쿼터와 투표권을 보유하며 IMF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.

- 세계은행의 경우도 개도국 및 이행국(Developing and Transition Countries)의 의결권 상향조정 및 참여 확대를 통해 이 국가들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음.

- 이외에도 현재 진행 중인 국제금융기구 개혁에는 이사회 구성 및 경영진 선출방식 개선과 국제금융기구의 추가 재원 확충 등도 포함되어 있음.

○ 두 번째 문제와 관련하여 IMF는 금융위기 이후 유동성 부족을 겪는 회원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5,000억 달러에 달하는 신규 재원을 확보하기로 하였으며, 다자개발은행도 대출한도를 최소 1,000억 달러 확대함.

■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이후 열린 세 차례의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구체적인 개혁논의가 진전되어 점차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.

- 2008년 11월 제1차 G20 워싱턴 정상회의에서는 국제금융기구에서 신흥·개도국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합의함.

- 2009년 4월 제2차 G20 런던 정상회의에서는 신흥·개도국의 참여 확대를 위해 IMF의 쿼터와 세계은행의 의결권 개

혁을 조기에 추진할 것을 강조함.

- 2009년 9월 제3차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는 IMF 쿼터 과다대표국 보유분 가운데 최소 5%를 과소대표된 신흥·개도국으로 이전할 것과 세계은행의 의결권을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최소 3% 이전할 것을 촉구함.

○ 세계은행의 의결권 및 IMF 쿼터와 투표권 개혁을 각각 2010년 4월과 2011년 1월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함.

■ 최근 열린 G20 재무장관·중앙은행총재 회의(4.23)와 IMF·세계은행 연차총회(4.24-25)에서 보다 진전된 결론이 도출되었음.

- 세계은행은 개발위원회(Development Committee)¹⁾ 회의에서는 일부 선진국의 의결권 중 3.13%를 개도국 및 이행국으로 이전하기로 합의되었음.

- G20 재무장관·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는 IMF 쿼터 조정의 개혁시한을 2010년 11월 G20 서울 정상회의로 앞당기도록 촉구함.

○ 이에 따라 다음 날 열린 국제통화금융위원회(IMFC: International Monetary and Financial Committee)²⁾에서는 2011년 1월 이전에 쿼터 개혁을 완료하는 데 합의되었음.

■ 향후 국제금융기구 지배구조 개혁은 정해 놓은 개혁시한에 따라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.

- 이런 긍정적인 전망의 이면에는 이번 금융위기를 계기로 변화된 세계경제질서에 대한 인식과 G20 체제의 높은 개혁의지가 자리잡고 있음.

■ 현재 우리나라의 국제금융기구 쿼터와 의결권 비중은 경제규모에 비해 과소대표되어 있는데, 우리의 지분 확대를 위해 지배구조 개혁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함.

- 본고에서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세계은행그룹과 IMF의 지배구조 개혁의 내용을 살펴보고,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모색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.

1) 세계은행 내 24개의 그룹 대표로 구성되는 장관급 자문기구로 1년에 2회(춘계회의, 연차총회) 개최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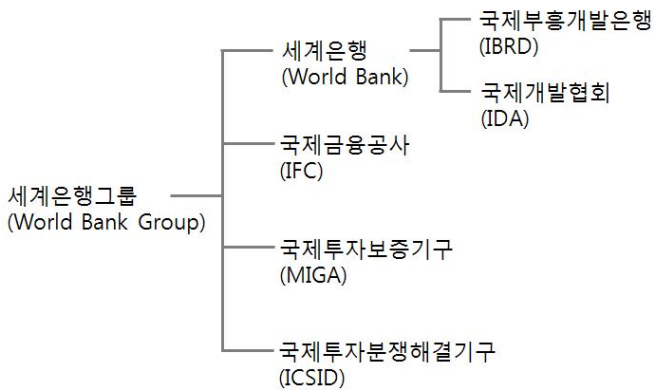
2) IMF 24개 이사국의 재무장관이 모여 IMF의 주요 의제를 논의하는 최고위급 회의임.

2. 세계은행그룹 지배구조 개혁의 주요 내용

■ 세계은행그룹(World Bank Group)은 주로 저소득국가들의 경제개발 지원을 위해 설립되었으며, 국제부흥개발은행(IBRD) · 국제개발협회(IDA) · 국제금융공사(IFC) · 국제투자보증기구(MIGA) ·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(ICSID)로 구성되어 있음.

- 이 중 세계은행은 IBRD와 IDA로 이루어짐.

그림 1. 세계은행그룹의 구성



■ 2008년 10월 졸릭(Zoellick) 총재의 요청에 의해 세계은행의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고위급 개혁위원회가 조직되면서 개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.

- 과거에는 과다 지분 보유국인 미국과 유럽국가들의 개혁의 지 부족으로 인해 세계은행의 지배구조 개혁논의가 다소 부진하였음.

- 주요 의사결정기구인 집행위원회의 구성원 25명 중 9명이 지분조정에 미온적인 유럽국가에 배정되어 있는 점도 세계은행 개혁의 효율성 저하를 초래하였음.

- 2009년 9월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세계은행의 투표권을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최소 3% 이전하기로 합의하였음.

- 같은 해 10월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개발위원회에서 개도국 및 이행국의 투표권을 2010년 4월까지 최소 3% 상향 조정하기로 합의하였음.

- 이러한 투표권 비율 조정은 세계은행그룹 내에서 개도국 및 이행국의 대표성을 높이고, 장기적으로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균형잡힌 투표권 배분을 이루기 위한 것임.

■ 세계은행그룹은 지난 4월 25일 미국 워싱턴 D.C.에서 열린 개발위원회 회의에서 의결권 개혁(Voice Reform)과 자본증자 방안에 합의함.

- 이번 세계은행그룹의 의결권 개혁은 주로 IBRD와 IFC에 대해 이루어졌음.

가. 국제부흥개발은행(IBRD)의 투표권 개혁

■ 지난 4월 개발위원회에서 합의된 개혁안은 2008년 합의된 1단계 의결권 개혁안에 이은 2단계 개혁안임.

- 1단계 개혁안에 따르면 전체 투표권의 5.55%를 기본표로 추가 배분하고, 이때 투표권 비중이 감소한 16개 개도국 및 이행국에 대해서는 투표권을 추가로 할당하여 기존의 비중을 유지하도록 함.³⁾

- 개도국 및 이행국의 투표권 비중은 42.60%에서 44.06%로 증가하였으며, 선진국의 비중은 57.40%에서 55.94%로 감소하였음.

- 본 개혁안이 발효되기 위해 85%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약 15%의 의결권이 추가로 요구됨(2010년 4월 19일 기준).

■ 2010년 2단계 의결권 개혁에서는 처음으로 IBRD 지분 계산공식을 사용하여 개도국 및 이행국의 투표권을 산출함.

- 그간 IBRD는 회원국의 지분산정에 있어서 각국의 경제규모를 반영하진 하였으나, 별도의 지분 계산공식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IMF의 쿼터 비중을 고려하여 산정해 왔음.

■ 이번에 발표된 IBRD 지분개혁안은 가맹국의 경제적 비중(Economic Weight), 재정적 기여도(Financial Contribution), 개발 기여도(Development Contribution)에 대해 각각 75%, 20%, 5%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됨.

- 경제적 비중은 가맹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GDP 비중으로서, 2006~08년 동안의 시장환율-GDP와 PPP-GDP⁴⁾를 6:4의 비율로 가중평균함.

3) IBRD와 IFC의 투표권은 가맹국에 일률적으로 250표씩 주어지는 기본표와 출자주식 1주당 1표씩 배분하는 비례표로 구성됨.

4) PPP-GDP는 실질구매력을 기준으로 한 구매력평가지수 환율로 계산한 GDP임.

- 재정적 기여도는 세계은행그룹에서 주로 IDA에 대한 재정적 기여도를 일컬으며, 이는 IDA에 대한 기여도를 IBRD의 지분 산정에 연계시킴으로써 두 기구에 대한 책임과 지원을 동시에 강조하기 위한 것임.
- 개발 기여도는 개도국 및 이행국의 IDA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소규모 저소득국가들의 투표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.

■ 개도국 및 이행국의 투표권 비중은 3.13%포인트 증가한 47.19%에 달함.

- 중국의 경우 종전의 2.77%에서 4.42%로 크게 늘었으며, 미국·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영향력이 큰 국가로 부상함.
- 인도, 브라질, 멕시코 등도 이번 조정의 수혜국임.
- 미국의 투표권 비중은 15.85%로 변화가 없으며 비토권도 유지되고 있음.
- 일본과 주요 유럽국가들의 투표권 비중이 하향조정되었으며, 독일은 중국에 3위 자리를 내놓게 됨.

표 1. 주요국의 IBRD 투표권 변화

(단위: %)

| G7/유럽 | 기존 | 2008 1단계 개혁안 | 2010 2단계 개혁안 | 신흥개도국 | 기존 | 2008 1단계 개혁안 | 2010 2단계 개혁안 |
|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미국 | 16.36 | 15.85 | 15.85 | 중국 | 2.78 | 2.77 | 4.42 |
| 일본 | 7.85 | 7.62 | 6.84 | 사우디아 아라비아 | 2.78 | 2.77 | 2.77 |
| 독일 | 4.48 | 4.35 | 4.00 | 러시아 | 2.78 | 2.77 | 2.77 |
| 프랑스 | 4.30 | 4.17 | 3.75 | 인도 | 2.78 | 2.77 | 2.91 |
| 영국 | 4.30 | 4.17 | 3.75 | 브라질 | 2.07 | 2.06 | 2.24 |
| 이탈리아 | 2.78 | 2.71 | 2.64 | 멕시코 | 1.18 | 1.17 | 1.68 |
| 캐나다 | 2.78 | 2.71 | 2.43 | 대한민국 | 0.99 | 0.99 | 1.57 |
| 네덜란드 | 2.21 | 2.15 | 1.92 | 베네수엘라 | 1.27 | 1.27 | 1.11 |
| 벨기에 | 1.80 | 1.76 | 1.57 | 아르헨티나 | 1.12 | 1.12 | 1.12 |
| 스페인 | 1.74 | 1.70 | 1.85 | 인도네시아 | 0.94 | 0.94 | 0.98 |

자료: World Bank, <http://www.worldbank.org/voiceibrd>.

■ 또한 이번 개혁으로 총 862억 달러의 IBRD 재원 확충이 이루어질 예정임.

- 여기에는 584억 달러의 일반증자(GCI)와 278억 달러의 특

별증자(SCI)가 포함된 것임.⁵⁾

- 통상 IBRD에 대한 납입자본금 중 10%는 미국달러나 금으로 납입하고 나머지 90%는 자국통화로 납입하나, 이번에는 일반증자와 특별증자 모두 자국통화로 자유롭게 납입하는 것을 허용함.

나. 국제금융공사(IFC)의 투표권 개혁

■ IFC의 투표권 개혁은 기본표의 추가 배분과 공개출자방식(Open Subscriptions SCI)⁶⁾의 도입을 통해 이루어짐.

- 개도국 및 이행국의 IFC 투표권 비중은 현재 33.4%로 이는 IBRD 투표권 비중 44.06%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편임.
- IFC는 독자적인 지분산정방식을 갖고 있지 않아 가맹국의 신규 가입시 IBRD의 지분비중을 반영하여 결정함.
 - 이에 불구하고 지분 구성에서 IBRD와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두 기구의 가맹국 구성이 서로 달라 자본증자 시 그 규모나 횟수에 따라 지분 구성이 달라졌기 때문임.
- 이번 IFC의 투표권 개혁은 IBRD 지분 구성과의 차이를 좁히는 동시에, IFC에서 개도국 및 이행국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실시되었음.

■ 현재 총 투표권의 1.88%에 불과한 기본표의 비중을 5.55%로 높여 개도국 및 이행국으로 하여금 추가적인 자본 부담 없이 의결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.

■ 또한 특별증자를 공개출자방식을 통해 증액하고, 개도국 및 이행국에 출자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이들의 비례투표수를 높일 수 있도록 함.

- 2억 달러 규모의 특별증자를 통해 개도국 및 이행국의 투표권 비중은 33.4%에서 39.48%로 6.07%포인트 증가함.

5) 일반증자(GCI: General Capital Increase)는 재원 확대를 목적으로 회원국의 기존 출자비율에 따라 주식을 배정함. 반면 특별증자(SCI: Selective Capital Increase)는 몇몇 회원국의 상대적 인경제력 변동과 세계은행에 대한 전반적 기여도를 반영하기 위해 특정 국가들에만 추가 주식을 배정함.

6) 특별증자를 희망하는 개도국 및 이행국이면 어느 국가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분 구성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.

- 다만 개도국 및 이행국의 IFC 의결권은 IBRD의 의결권 (47.19%, 2010년 개혁안)에 비해 아직도 낮은 수준이므로 향후 추가 조정될 것으로 예상됨.

표 2. 2010년 IFC 투표권 개혁

| | IFC 공개출자 | 개도국·이행국의 투표권 | 선진국의 투표권 |
|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|
| 현재 비중 | - | 33.4% | 66.6% |
| 2010년 개정안 | 2억 달러 | 39.48% | 60.52% |

주: 5.55%의 기본투표권을 할당했을 때, 투표권 비중이 줄어드는 개도국 및 이행국들이 기존의 투표권 비중을 유지하기 위해 공개출자에 참여한다는 가정에 따름.
 자료: World Bank(2010), "World Bank Group Reform: Enhancing Voice and Participation of Developing and Transition Countries in 2010 and Beyond, Developing Committee Meeting, Office of the Corporate Secretary(SECVF), World Bank, April 2010.

표 3. 2010년 개정안에 따른 주요국의 IFC 투표권 변화

(단위: %)

| G7/유럽 | 기존 | 2010 개정안 | 신흥개도국 | 기존 | 2010 개정안 |
|-------|-------|----------|---------|------|----------|
| 미국 | 23.59 | 20.96 | 러시아 | 3.38 | 3.81 |
| 일본 | 5.86 | 6.01 | 인도 | 3.38 | 3.81 |
| 독일 | 5.35 | 4.77 | 중국 | 1.02 | 2.29 |
| 프랑스 | 5.02 | 4.48 | 브라질 | 1.65 | 2.27 |
| 영국 | 5.02 | 4.48 | 사우디아라비아 | 1.26 | 1.82 |
| 이탈리아 | 3.38 | 3.02 | 아르헨티나 | 1.59 | 1.59 |
| 캐나다 | 3.38 | 3.02 | 멕시코 | 1.15 | 1.15 |
| 네덜란드 | 2.33 | 2.09 | 베네수엘라 | 1.15 | 1.15 |
| 벨기에 | 2.11 | 1.89 | 인도네시아 | 1.19 | 1.19 |
| 스페인 | 1.54 | 1.39 | 대한민국 | 0.67 | 1.06 |

자료: World Bank, <http://www.worldbank.org/voiceifc>.

3. IMF 지배구조 개혁의 방향과 주요 내용

- IMF는 각 회원국에 배분된 쿼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국제금융기구이므로, IMF의 쿼터 개혁은 국제사회에서 각국의 영향력과 발언권을 재조정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님.
 - IMF 쿼터는 회원국의 국제수지 불균형 조정을 위한 신용공여의 재원으로 사용될 뿐 아니라, 투표권 산출과 위기 시 IMF 신용 이용한도 및 차입조건, 그리고 특별인출권(SDR) 배분 규모 등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함.
 - 따라서 IMF 쿼터 증액은 투표권 확대를 통한 영향력 확대뿐만 아니라, 위기 발생 시 낮은 비용으로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함.

- 회원국은 국제수지 불균형으로 인한 자금 조달 시 연간 쿼터의 100% 또는 누적으로 300%까지는 낮은 이자율⁷⁾로 용자 받을 수 있음.

■ IMF는 회원국의 경제력에 상응하는 적정 규모의 쿼터를 산출하여 적용하고 있지만, 급변하는 세계경제의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옴.

- 쿼터공식을 사용하여 회원국의 계산쿼터를 산정하나, 실제 적용되는 쿼터는 가맹국 간의 정치적 협상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계산쿼터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음.

■ G7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IMF 지분의 60% 정도를 차지하면서 과대표되어 있고, 상대적으로 중국 등 신흥국들은 과소대표되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.

- G7 국가들의 현행 IMF 쿼터 및 투표권을 더하면 각각 45.24%와 44.42%에 달함.

- 미국은 현재 17.09%의 쿼터를 보유하고 있으며, 16.74%에 달하는 최대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음.

- 또한 186개 회원국 중 유일하게 비토권을 보유하고 있어 IMF에 대한 영향력이 지대함.⁸⁾

- 일본은 6.12%의 쿼터와 6.01%의 의결권을 보유하여 미국 다음으로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음.

- 유럽은 전체 지분의 30%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데, 그 중 경제규모가 큰 독일(5.87%), 영국(4.85%), 프랑스(4.85%), 이탈리아(3.19%)가 높은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음.

- 한편 중국은 현재 3.72%의 쿼터와 3.65%의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는데, 이는 세계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경제규모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.

- 브라질, 러시아, 인도, 중국의 브릭스(BRICs) 국가들은 캐나다, 네덜란드, 벨기에, 스페인 등의 나라보다 큰 경제규모에도 불구하고 현재 낮은 수준의 쿼터를 보유하고 있음.

■ 현재 적용되는 IMF 쿼터는 2006년 제13차 일반개정안에 따

7) 기본수수료+1~2%포인트.

8) IMF의 의사결정은 85% 다수결에 의해 이루어짐.

른 것이고, 2008년에 이루어진 특별개정안은 현재 기준을 남겨두고 있으며 올해 제14차 일반개정안이 논의 중에 있음.

가. 2006년 제13차 일반개정안

■ 제13차 일반개정안에서는 지나치게 과소대표되어 있는 한국, 중국, 멕시코, 터키의 쿼터를 상향조정하였음.

- 당시 한국은 0.76%에서 1.35%, 중국은 2.98%에서 3.72%, 멕시코는 1.21%에서 1.45%, 터키는 0.45%에서 0.55%로 확대되었음.
- 개선안은 총 쿼터를 1.8% 증액함과 동시에, 이 증액분을 과소대표된 국가에 할당하는 방식을 택함.

표 4. 주요국의 IMF 쿼터와 GDP 비중

(단위: %)

| G7/유럽 | 현행 쿼터 ¹⁾ | GDP ²⁾ | 신흥개도국 | 현행 쿼터 ¹⁾ | GDP ²⁾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미국 | 17.09 | 22,842 | 중국 | 3.72 | 9,645 |
| 일본 | 6.12 | 7,170 | 사우디아라비아 | 3.21 | 0,864 |
| 독일 | 5.98 | 4,719 | 러시아 | 2.73 | 3,024 |
| 프랑스 | 4.94 | 3,467 | 인도 | 1.91 | 4,110 |
| 영국 | 4.94 | 3,495 | 브라질 | 1.40 | 2,897 |
| 이탈리아 | 3.24 | 3,074 | 멕시코 | 1.45 | 2,158 |
| 캐나다 | 2.93 | 2,086 | 대한민국 | 1.35 | 1,870 |
| 네덜란드 | 2.37 | 1,052 | 베네수엘라 | 1.22 | 0,443 |
| 벨기에 | 2.12 | 0,621 | 아르헨티나 | 0.97 | 0,724 |
| 스페인 | 1.40 | 2,174 | 인도네시아 | 0.96 | 1,275 |

주: 1) 현행 쿼터는 제13차 일반개정안을 따르고 있음.
 2) GDP는 PPP-GDP 기준임, 1993~2005년.
 자료: IMF, <http://www.imf.org/external/np/sec/memdir/members.htm>(2010년 4월 말 기준); IMF, http://www.imf.org/external/np/fin/quotas/200_9/091509.htm.

나. 2008년 특별개정안

■ 2008년에는 신흥·개도국의 쿼터를 추가 증액하는 특별개정안이 합의되었으며, 이는 현재 기준을 남겨두고 있음.

- 특별개정안에 따르면 54개국의 쿼터 비중이 총 4.9%포인트 증가하고, 투표권 비중은 135개국에서 5.4%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.
- 2010년 4월 19일 기준으로 70개 국가가 개정안을 비준했으며, 추가로 42개국의 비준을 거쳐야 발효될 수 있음.

■ 2008년 특별개정안은 새로운 쿼터 계산공식을 사용하여 가맹국의 경제력에 상응하는 적정 규모의 쿼터를 산출하였음.

- IMF는 각 회원국의 국내총생산(GDP), 개방 정도(openness), 변동성(variability) 및 외환보유액을 이용한 계산공식을 사용하여 쿼터 비중을 계산함.
 - 계산쿼터 비중 = $(0.5 \cdot Y + 0.3 \cdot P + 0.15 \cdot V + 0.05 \cdot R)^{0.95}$
 단, Y : 최근 3년간 연평균 GDP,⁹⁾
 P : 최근 5년간 연평균 경상 지급 및 수입,
 V : 최근 13년간 경상수입 및 순자본흐름의 3년 이동평균의 표준편차,
 R : 최근 12개월 월평균 외환보유액.
- 새로운 쿼터 계산공식을 이용함으로써 가맹국의 경제력에 상응하는 쿼터를 산정하고 그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함.

■ 또한 이 개정안은 기본표를 종전의 250표에서 750표로 늘리는 방식을 통해 회원국 간의 공평성을 강조하였으며, 이는 궁극적으로 저소득국가들의 대표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였음.

- IMF 창설 당시 총 투표권에서 기본표가 차지하는 비중은 11%였으나, 이후 쿼터 조정과정을 거치면서 2%로 낮아졌음.
- 그러나 특별개정안을 통해 기본표를 3배 증가시킴으로써 기본표의 비중은 5.502%로 높아졌음.
- 이 개정안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쿼터는 1.35%에서 1.41%로 증가하며, 투표권은 1.33%에서 1.36%로 증가하게 됨.
- 한편 중국의 경우 쿼터는 3.72%에서 4.00%로, 투표권은 3.66%에서 3.81%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쳐 적정수준과는 차이가 있어 보임.

다. 제14차 일반개정안

■ 최근 G20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IMF 쿼터 개혁은 본래 2011년 1월까지 완료하기로 한 제14차 일반개정안에 따른 것임.

■ 그러나 2010년 4월에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와 IMFC 회의에서 IMF 쿼터 개혁의 가시적인 성과를 올해 11월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도출하기로 합의하였음.

9) GDP는 시장환율-GDP와 PPP-GDP를 6:4의 비율로 적용함.

- 제14차 일반개정안은 제13차 일반개정과 2008년 특별개정 안에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의 개혁에 중점을 둬.
- 쿼터 산정과정의 투명성과 가맹국의 경제력에 상응하는 적정 쿼터를 산출하기 위해 최근에 갱신된 1995~2007년의 연간 자료를 사용함.

표 5. 제14차 일반개정안에 따른 주요국의 쿼터 비중*

(단위: %)

| 순위 | 국가 | 제14차 개정 쿼터 | 계산쿼터 |
|----|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|
| 1 | 미국 | 17,670 | 17,816 |
| 2 | 일본 | 6,556 | 6,987 |
| 3 | 독일 | 6,110 | 5,888 |
| 4 | 프랑스 | 4,505 | 4,213 |
| 5 | 영국 | 4,505 | 4,584 |
| 6 | 중국 | 3,996 | 7,474 |
| 7 | 이탈리아 | 3,307 | 3,098 |
| 8 | 사우디아라비아 | 2,930 | 0,850 |
| 9 | 캐나다 | 2,672 | 2,423 |
| 10 | 러시아 | 2,494 | 2,434 |
| 11 | 인도 | 2,442 | 2,184 |
| 12 | 네덜란드 | 2,166 | 1,898 |
| 13 | 벨기에 | 1,932 | 1,362 |
| 14 | 브라질 | 1,783 | 1,969 |
| 15 | 스페인 | 1,688 | 2,243 |
| 16 | 멕시코 | 1,521 | 1,864 |
| 17 | 스위스 | 1,451 | 1,234 |
| 18 | 대한민국 | 1,412 | 2,176 |
| 19 | 호주 | 1,358 | 1,326 |
| 20 | 베네수엘라 | 1,115 | 0,455 |

주: * 2009년 4월 Communiqué에 따라 제14차 일반개정안 검토를 조속히 시작하기 위해 IMFC의 요청으로 만들어졌으며, 현재 논의 중에 있음.

자료: IMF, <http://www.imf.org/external/np/fin/quotas/2009/091509.htm>.

■ 그러나 국가들마다 다양한 입장과 주장이 있어 향후 합의 도출과정에서 당사국들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함.

- 쿼터 개혁 논의의 초기에 미국은 신흥개도국으로 5%의 쿼터 이전을 주장했지만, 유럽은 쿼터 이전에 반대하며 미국의 비토권을 없애야 한다고 대응함.
- 반면 브릭스(BRICs) 국가들은 신흥개도국으로 7%의 쿼터 이전을 요구하며 대립함.
-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도 각국의 비준과정을 거쳐야 하므로, 실제 발효되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.

4. 우리나라의 지분 현황과 시사점

가. 우리나라의 세계은행그룹·IMF 지분 현황

■ 그동안 우리나라의 세계은행의 투표권 비중은 과소대표되어 있었음.

- 세계은행의 지배구조 개혁논의가 IMF보다 다소 부진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투표권 비중이 낮은 상태로 유지되었음.

- 우리나라의 IMF 투표권 비중이 1.33%인 점을 감안할 때, 0.99%의 IBRD 투표권 비중은 낮게 책정된 상태로 유지되어 왔음.

■ 그러나 2010년 IBRD 개혁안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투표권 비중은 0.99%(22위)에서 1.57%(16위)로 상승하게 됨.

- 이에 따라 한국은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작은 호주보다 높은 투표권 비중을 보유하게 됨.

- 그러나 네덜란드의 경우 경제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투표권을 보유하고 있어, 2010년 개혁안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향후 개선의 여지가 있음.

■ 2010년 IFC 개혁안에서도 우리나라의 투표권은 0.67(28위)에서 1.06(21위)로 7계단 상승함.

표 6. IBRD·IFC의 투표권 변화

(단위: %)

| | 세계경제 비중* | IBRD | | IFC | |
|------|----------|------|----------|------|----------|
| | | 현재 | 2010 개혁안 | 현재 | 2010 개혁안 |
| 멕시코 | 1,902 | 1,18 | 1,68 | 1,15 | 1,15 |
| 인도 | 1,836 | 2,78 | 2,91 | 3,38 | 3,81 |
| 한국 | 1,791 | 0,99 | 1,57 | 0,67 | 1,06 |
| 호주 | 1,605 | 1,52 | 1,33 | 1,97 | 1,77 |
| 네덜란드 | 1,414 | 2,21 | 1,92 | 2,33 | 2,09 |

주: * 세계경제 비중은 1995~2007 평균 GDP를 기준으로 함.

자료: IMF, World Bank.

■ 이번 세계은행그룹의 의결권 조정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발언권과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됨.

- 또한 이번 세계은행의 지분 확대는 현재 진행 중인 IMF의 쿼터 개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.

■ IMF에 대해 우리나라는 현재 1.35%의 쿼터와 1.33%의 투표권을 보유함.

- 우리나라의 IMF 계산쿼터는 2.176%이지만 현재 적용되는 쿼터는 1.35%에 불과함.

- 반면 스위스, 네덜란드, 벨기에 등의 유럽국가들은 경제규모가 우리보다 작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쿼터 비중을 보유함.

■ 현재 동의절차를 남겨둔 2008년 특별개정안에 따르면, 우리가 속한 IMF 소속그룹 내에서 한국(1.41%)의 쿼터 비중이 호주(1.36%)를 능가하면서 그룹 내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될 것임.

- 우리나라는 현재 IMF 24개 소속그룹의 하나인 태평양지역 그룹의 대표로서 IMFC에 이사국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음.

■ 이러한 지배구조 개혁 노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세계경제질서 하에서 국제금융기구의 신뢰성과 정당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임.

나. 우리나라의 쿼터 및 투표권 확대 노력

■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에 상응하는 쿼터 및 투표권의 상향조정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을 높이는 계기로 활용해야 할 것임.

- 현재 적용되는 우리나라의 IMF 쿼터는 계산쿼터보다 낮으므로,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로 볼 때 상향조정될 여지가 충분히 있으며 투표권 비율도 높아져야 함.

○ 스위스(1.59%), 네덜란드(2.38%), 벨기에(2.12%) 등의 유럽 국가들은 우리보다 작은 경제규모에도 불구하고 높은 쿼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.

- 특히 2011년 1월 이전까지 마무리하기로 한 IMF의 쿼터 개혁에서 우리나라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.

○ 우리나라의 쿼터 증액을 위한 대응전략을 수행함에 있어 우리와 비슷한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들과의 공조 및 협력을 도모해야 할 것임.

○ 우리나라는 이번 IMF의 5,000억 달러 신규재원 증액 과정에서 2% 이상을 분담하기로 했는데, 우리나라의 쿼터 증액을 요구하기 위해 이를 활용해야 할 것임.

다. 국제금융기구 발행채권 매입 검토

■ 국제금융기구들은 쿼터 외에도 채권 발행을 통해 재원을 확충하고 있는데, 우리나라도 국제금융기구가 발행한 채권을 매입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.

- 최근 IMF의 채권 발행과 관련하여 브라질, 인도는 각각 100억 달러 규모의 채권 매입의사를 밝힌 바 있고, 특히 중국은 500억 달러 규모의 IMF 채권 매입 시 위안화로 결제하기로 협정을 맺음으로써 중국 통화의 위상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됨.

- 국제금융기구 발행 채권은 신용도와 안전성이 보장되며, 채권 매입을 통해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영향력을 간접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채권투자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.

-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번엔 부담하기로 한 IMF 추가 분담금 100억 달러 중 일부를 IMF 채권 매입을 통해 참여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음.

○ IMF 채권은 최대 5년 만기로 발행되며, 회원국 중앙은행과 SDR을 보유하는 다자기관 간의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회원국에게 새로운 투자수단이 될 수 있음. **KIEP**